

2012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이 성 희*

I. 2012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1. 상반기 임단협 노사갈등 증가 추세

2012년 상반기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정부나 민간기관의 경제전망에서는 3.5~3.7%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었는데, 지난 6월달에 들어서서는 3% 수준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정도로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갈등은 증가추세에 있다.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높아지는데, 기업들의 지불능력은 약화되면서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경향은 파업발생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파업발생건수를 보면 34건으로 2009년 이후 파업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의 경우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파업발생과 노동

〈표 1〉 파업발생건수 및 노동손실일수 추이

| | 과거 5년간 현황 | | | | | | 2012년 6월 |
|------------|-----------|----------|----------|----------|----------|-------|----------|
| | 2007년 6월 | 2008년 6월 | 2009년 6월 | 2010년 6월 | 2011년 6월 | 평균 | |
| 파업발생건수(건) | 34 | 35 | 41 | 29 | 22 | 32.3 | 34 |
| 노동손실일수(천일) | 95 | 264 | 146 | 179 | 183 | 173.4 | 236 |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musedori@kli.re.kr).

손실일수를 놓고 보면 파업발생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노동손실일수는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 임금교섭 타결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

올해의 임금교섭 진행상황을 보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교섭 자체는 지난해보다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협약임금인상률은 5.2%로 지난해 6월의 임금인상률(5.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교섭 타결률은 6월 말 기준으로 35.3%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말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 업체에서는 임금교섭 타결률이 예년보다 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임금교섭 타결률이 낮은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지불여력은 낮아지는 데 반해, 생활물가가 상승하면서 노조의 요구수준은 높아져 노사간 요구수준 격차가 더 벌어진 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3. 임단협 주요 쟁점은 근로조건 개선

올해 상반기의 임단협 교섭의 주요 쟁점은 생존권 요구나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경제적 요구가 중심이었다.

지난 6월 택시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생존권 요구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여파로 택시이용객이나 화물운송물량은 줄어들고 LPG, 경유값은 오르면서 이들 택시,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입은 계속 악화돼 왔다. 이런 상황은 이들 택시노조,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택시노조의 요구는 LPG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 실질소득증가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화물연대의 경우도 표준운송당가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등 경제적인 요구가 중심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7월 13일, 20일 경고총파업을 했다. 금속노조의 요구를 보면 임금인상 요구와 심야노동 철폐,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4. 완성차노조 등 대기업노조의 조직력 회복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금속노조 총파업에서 완성차 3사 노조가 투쟁에 동참하는 등 대기업노조가 투쟁의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3일

금속노조의 하루 경고총파업에는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노조 등 완성차노조가 같이 참여를 했다. 여기에 금속노조 산하 대기업노조들도 대거 총파업에 동참을 했다.

비록 하루 4시간 경고파업의 성격을 띠긴 했지만 완성차노조, 대기업노조들이 이렇게 투쟁의 전면에서 나선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현대차노조의 경우도 4년 만에 처음 파업에 돌입하는 것일 정도로 이들 완성차노조가 함께 파업에 나선 것은 MB정부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금속노조는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단기간의 총파업을 반복할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경우도 7월 30일 총파업 돌입을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완성차노조, 대기업노조들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MB정부 들어서 조직력이 위축돼 있던 노조운동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운동 내에서 조직력이 갖춰진 대기업노조들을 중심으로 투쟁력을 회복해 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5.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변화

올해 상반기에 복수노조 허용 법시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주요한 관심사였다. 지난해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복수노조 설립붐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노조 설립붐이 올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먼저 복수노조 설립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복수노조 설립붐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복수노조 허용 첫달인 지난해 7월에는 하루 10.4개씩, 한 달 동안 322개의 노조가 설립돼 말 그대로 복수노조 설립붐이 일어났지만 올해 들어 노조 설립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 6월달의 경우 설립된 노조는 25개로 하루 평균 0.8개에 불과했다.

올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설립된 복수노조는 612개였다. 이들 복수노조 설립을 업종별로 보면 택시업종이 242개, 버스업종이 110개로 운수업종이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96개 사업장), 제조업(86개 사업장), 도소매서비스 업종(86개 사업장) 등에서 신규노조 설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수노조 설립붐으로 노조활동 전반에 폭넓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복수노조는 기존 양대노총 소속 노조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새로 설립된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고 미가맹 노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복수노조가 236개, 민주노총에서 분화

한 복수노조가 189개나 되지만, 이들 신규노조 중에서 85%가 미가맹 노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상급단체 중심의 노조연대 활동은 줄어들고, 개별화된 기업별 노조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노조 설립 이후 과반수노조 지위가 바뀌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신규노조 중 47.6%가 과반수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 분화 노조에서는 19.9%가, 미가맹 사업장에서는 32.8%가 과반수노조가 됐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노조활동 노선 변화로 이어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에 유성기업, KEC, 발레오만도, 한진중공업 등 그동안 노사갈등이 극심했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인 성향의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신규노조가 다수노조 지위를 갖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의 단체교섭 방식을 보면 대부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일각에서는 개별교섭과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복수의 교섭창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단체교섭을 타결했거나 교섭 중인 복수노조 사업장은 518곳인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504곳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노사, 노-노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복수노조 관련 결정신청 사건은 421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교섭공고 요구신청이 각각 193건(46.8%), 142건(3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 결정신청이 56건(13.6%),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이 21건(5.1%)이었다.

이 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사건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12월 말까지) 133건에 불과했던 신청건수는 올 들어 5개월간 279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에만 138건이 접수됐다.

6. 4.11 총선에서 노동계의 정치적 진출

올해 4.11 총선에서는 노동계 출신 인사가 44명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등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창당 때부터 직접 참여해서 민주통합당의 노동분야 정책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이용득 위원장이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가장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민주노총도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여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등 적극적인 정치진출을 시도했다.

이러한 4.11 총선에서의 정치진출 시도는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 후보 12명(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6명, 통합진보당 4명)이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써 19대 국회에서는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해 노동계의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출신의 국회진출을 보면 심상정 의원과 정진후 의원 등 2명에 그쳐 총선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도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으로 나뉘어져 있어 실제 노동계의 정치적 목소리는 4.11 총선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4.11 총선의 정치적 효과 중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4.11 총선을 계기로 노동분야 정책 공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비정규직 해법, 복수노조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동조합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총선 이후에도 공약을 토대로 한 법개정안으로 입법발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와 관련해 대표시정신청제도,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 차별시정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했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차별시정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입법 발의했다. 통합민주당, 진보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복수노조 자율교섭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율화 등 노동조합법 개정을 비롯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의 적용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러한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발언권 강화, 노동분야 정책 이슈의 증가는 향후 하반기에 노사관계 쟁점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II.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1.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노사갈등 증가

올해 하반기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파고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유럽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던 독일경제마저 신용등급이 하락 위기에 처하면서 유럽발 경제위기의 파고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 있다.

이런 경제전망으로 볼 때 올 하반기 임단협 교섭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부터 임금교섭 타결률은 낮았고, 특히 대기업의 임단협 교섭은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라서 하반기 임단협에서 노사갈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단체교섭에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건설, 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상태다. 이런 구조조정 바람은 하반기에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구조조정은 그 특성상 생존권 투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만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나타나도 사회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2. 임단협 투쟁과 정치적 요구의 결합

올해 하반기에는 임단협 교섭이 정치적 요구 투쟁과 결합되면서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하반기 내내 여야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도 정책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올 하반기에 임단협 투쟁 시기를 집중하면서 정책 제도개선 요구 투쟁과 결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의 경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정기국회를 전후해서 정책 제도개선 요구 투쟁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출신 신계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수에서도 야당이 더 많은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돼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노동계의 정책 제도개선 요구가 곧바로 국회 국정감사나 입법요구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야 정치권이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입법안만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 근로기준법 등 상당히 많다.

양대노총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9월부터 11월까지 임단협 투쟁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노동관련 법률개정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관련 정치쟁점들을 정치이슈화하려 할 것이다. 결국 올 하반기에는 노동계의 정치적 목소리는 높아지고,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노동관련 정책 제도개선 쟁점들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노동관련 쟁점을 둘러싼 정치적 파고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노동관련 쟁점의 정치 쟁점화

올해 하반기 노사관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수는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 후반기에 정부의 국정 장악력은 이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야당 등 정치권은 그동안 노사관계 현안 쟁점들을 국회에서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제도개선 쟁점뿐만 아니라 쌍용차 정리해고자 문제, 파업사업장에 대해 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한 직장폐쇄 문제 등 다양한 노사관계 쟁점들이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국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당도 기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럴 경우 노동정책의 추진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양 노총 간의 노정갈등 관계는 노동분야의 정책 추진력에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민주노총과 정부 간의 갈등관계를 한국노총이 조절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노총과 정부 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되면서 한국노총의 이러한 역할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대노총과 정부 간의 노정갈등은 노동 관련 쟁점이 곧바로 정치쟁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노동관련 쟁점에 대해 노정간에 정책협의를 통해 완충할 수 있는 채널이 약화되면서 노동계나 야당은 노동쟁점을 곧바로 국회에서 정치쟁점화하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노동관련 쟁점이 정치 쟁점화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양대노총의 지도부 선출 등 리더십 재구축 변수

올해 하반기에는 양대노총 모두 위원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김영훈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올해 12월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노총 출신 후보들의 국회진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이용득 위원장이 지난 4.11 총선 이후로 조직 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위원장 사퇴를 결정하면서 새롭게 위원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양대노총이 비슷한 시기에 위원장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징적인 것은 양대노총 모두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위원장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새로운 위원장이 어떤 성향을 띠는지가 향후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의 경우 차기 지도부가 대선에서 어떠한 정치방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역할구도가 상당히 다르게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위원장 체제에서 지금까지의 노선을 유지하여 통합민주당과 연대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노선 전환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새로운 위원장 선출이 민주노총의 조직력 결집과, 정책노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지도부가 얼마나 조직력을 결집시키고, 어떠한 정책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양대노총간의 관계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노사관계의 향배는 12월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 양측과 정치권은 그러한 대전환을 앞에 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올해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의 해답은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 **KLI**

